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52



2021. 03

펴다



다이내믹, 의정

국민 모두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10



30



32



34



38



40



42

국회보

2021 March vol.652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1년 3월 2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제방훈(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02)2266-189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고난을 이겨낸 만큼 서로 돕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꿈이 이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2월 임시국회 개회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국민통합위원 위촉장 수여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특집 _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 20 2050 탄소중립 위해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_ 윤순진
2050 탄소중립, 어렵지만 가야 할 길 _ 금한승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_ 이유진
2050 탄소중립 시대 준비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 _ 김지호
2050 탄소중립 관련 국회의 논의 _ 이혜경
- 30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촌의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
_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협치와 소통으로 열악한 농어업 환경 개선에 힘 모을 것”
_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34 길에서 길을 찾다 _ 김승원 의원
효와 애민정신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도시, 수원
- 38 칭찬합시다 _ 류호정 의원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40 의원의 좌우명_ 박진 의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 4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 한준호 의원
정치는 서비스, 새로운 정치 아닌 필요한 정치를 해야
- 4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손상 예방,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50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열어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법안’ 등 안전 의결
- 62 법률 시대를 읽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_ 이지민

64 국회 주재관 리포트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평가와 전망 _ 김현중

66 법 시행 그 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 만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70 위원회는 지금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북한 귀순자 관련
상황 보고 등 실시

74 국회 뉴스

82 기고

사상 첫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개최의 의미와 내용 _ 고상근
“재정·경제 분야 정책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역할 필요”
_ 박세용

86 국회 사람들

“국회의 안전을 위해 ‘철통방어’ 합니다”

88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누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한 실크로드의 작은 도시국가
_ 이광태

92 수목원 탐방

물향기수목원

96 바이러스의 역사

이슬람 제국을 탄생시킨 ‘페스트’ _ 도현신

98 국회 미술관

‘이산 자산, 그 사이 채움과 비움 _ 김준기

101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목련

102 오천 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2만km 대장정...한국 최초의 세계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_ 이광표

106 대한민국 문학기행

시인의 언덕에 빛나는 별 하나 _ 장태동

110 생활 속 우리말글

피동형을 피하세요 _ 김형주

111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10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9일부터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했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고,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

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호 증진 외교를 뛰어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11일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사구시, 국익중심'이라는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면담

박병석 의장은 2월 10일 UAE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모하메드 UAE 왕세제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수소 중심의 UAE '에너지 계획 2050'이 우리나라 뉴딜 정책과 유사한 만큼 협력 분야를 넓히자고 제안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며 "UAE는 한국과 미래를 공동 설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작년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고,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다.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돈독하다. 많은 나라들이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아크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과 UAE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3·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5·6·7호기도 계속 건설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자력 분야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 2030 부산엑스포 추진...UAE 측 지지 부탁

박 의장은 2월 11일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UAE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의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고바쉬 의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12일 UAE 파병부대인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게 “2020 두바이엑스포(2020년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 연기됨)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도울 것”이라면서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UAE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고바쉬 FNC 의장은 “2020 두바이엑스포가 개최되면 한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 의장을 두바이엑스포에 초대했다.

이어 고바쉬 FNC 의장은 “의장님의 방문으로 양국의 의회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UAE가 이런 친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장은 2월 12일 아부다비 에미리트 팰리

스 호텔에서 UAE 동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장은 “항상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750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사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파병 10주년 맞은 아크부대 설날 격려방문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중인 2월 12일 파병 10주년을 맞은 특전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과 땀이 한국과 UAE의 형제애를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세로 귀국



2월 1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사진 왼쪽),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바레인 상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하는 그날까지 군사협력과 신뢰·우정을 쌓는데 헌신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격려금과 격려품을 선물했다. 아크부대는 답례로 박 의장의 얼굴을 부대 훈련 사진으로 모자이크한 사진 액자 등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 군사외교관 아크부대원. 사랑하고 자랑스롭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는 처음 바레인 공식 방문

UAE 공식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박 의장은 2월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 회담을 시작으로 바레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마나마 소재 바레인 하원에서 열린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바레인-사우디 연륙교 건설 사업, 경전철 사업, 국

영석유회사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 기존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는 새롭게 협력을 넓히길 희망한다”며 “의회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레인의 ‘경제 비전 2030’ 계획에 산업 다각화, 지식경제 분야의 발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과 협력할 분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파우지아 하원의장은 “한국은 산업과 경제,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우지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후 박 의장은 곧바로 상원에서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상원의장과 만났다. 박 의장은 “최근 보건 분야에서 여러 MOU가



2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사프리아 왕궁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바레인 국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결됐는데 실질적인 계약과 실행으로 이어가도록 양국 의회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바레인이 추구하는 ‘경제 비전 2030’과 우리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은 접합점이 많으므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 의장은 “상원을 방문해 준 오늘이 바로 20년 전 바레인의 국민행동헌장이 선포된 기념일이다. 이날 의장님이 방문해 주신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다. 더 많은 협상과 MOU가 체결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마드 바레인 국왕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다음날 2월 15일 박 의장은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바레인 국왕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하마드 국왕은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며 우리나라와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마드 국왕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40년 된 인프라를 아직도 새것처럼 쓰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도 지었으면 좋겠다”며 한국기업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 연륙교 건설 수주액은 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장은 “바레인이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인프라

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과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고, 하마드 국왕도 적극 화답하며 구체적인 후속논의를 제안했다.

박 의장은 “바레인도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토가 좁아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레인도 영토가 좁은 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어 바레인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포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곧이어 바레인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국영방송 기자는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였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양국수교 45주년 만에 최초의 공식 방문”이라며 “국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바레인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태양광 기술협력 등 정부 간 협력 협의

박 의장은 2월 15일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박 의장과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박 의장이 “우리는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에 특허출원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술이 바레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



2월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바레인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총리 겸 왕세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 살만 왕세자는 “적층형 기술에 큰 관심이 있다. 담수화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담수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양국이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방산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오늘 만남은 양국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바레인으로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가 된다”는 말로 화답했다.

박 의장의 이번 UAE·바레인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2월 임시국회 개회

박병석 국회의장, “4월 보궐선거 후 개헌 논의해야”



2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국회는 2월 1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월 2~3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월 4일(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과 5일(경제 분야), 8일(교육·

사회·문화 분야)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는 2월 26일 열렸다.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1일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4월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면서 “내년 3월 대선이 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는 방안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임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3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2월 3일 국회국민통합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백신 개발과 확보, 접종 등 안전조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세워나가자”고 여야에 촉구



2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했다. 박 의장은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을 구성하겠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 “4차 재난지원금 준비…추경으로 맞춤·전 국민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금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 피해지원 '여야정 협의체'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 ‘코

로나19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공과금 3개월 면제조치,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략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버렸다. 서울·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2월 4~5일, 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실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월 4일과 5일, 8일 사흘간 실시됐다. 2월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2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가운데



2월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탄핵소추안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등 임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됐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건설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나”라고 질의하

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져 검토됐고, 외부로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를 거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합동전략사령부가 창설돼 총합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 나침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2월 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촉구하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면서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해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하겠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려고 하지 대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백신접종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24일 백신이 들어올 것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앞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언제 들어오느냐”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원래 2월 초를 얘기하다가 (2월) 말로 넘어간 상태”라며 “큰 차질 없이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법안’ 등 안건 72건 의결

한편, 국회는 2월 26일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6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아동학대사태를 신속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아동 권익 증진 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주택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 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 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월 3일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3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길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념의 산이 높고 갈등의 골이 깊다.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라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며,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 2인과 분

과위원별 7인의 위원을 합해 총 2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이 공동위원장으로, 정치분과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상돈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경제분과는 김광림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민병두 전 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직무대행,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분과는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김현권 전 의원,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채정 공동위원장은 “여유가 없었던 세상이 지나가고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와 역사는 쌓이고 쌓인 갈등을 풀기를 요구한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며 박병석 의장의 해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공동위원장은 “통합이라는 것은 국회가 본령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에서 이



2월 3일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회의 모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이외에는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갈등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책임하에 정치분과위원회는 법제실, 경제분과위원회는 예산정책처, 사회분과위원회는 입법조사처에서 최대한 실무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의미 있는 성과를 주문했다.

위촉식이 끝나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곧바로 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정치분과는 유인태 위원, 경제분과는 김광림 위원, 사회분과는 최영희 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2월 2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회사무처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국회 대혁신 추진,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입안 지원시스템 개선, 국회 코로나19 방역 대책,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특집]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탄소배출량의 합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친환경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net zero)은 온실가스 제거·흡수량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 비전’을 선포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전문가들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2050 탄소중립 위해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50 탄소중립,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시대 준비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팀장

2050 탄소중립 관련 국회의 논의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50 탄소중립 위해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목표에 최초로 합의한 이후 2020년 말까지 127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선언 국가들의 배출량 합계가 세계 총 배출량의 63%에 달한다(중국 25%, 미국 12%, 영국과 EU 8%, 그 외 18%).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1.5℃ 목표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2050년 탄소중립은 어느 국가도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되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시대적인 당위가 되었다. 문제는 탄소중립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대선 공약인 그린 뉴딜을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는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EU와 미국,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중점

EU와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EU는 향후 1조 유로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조 달러를 그린 딜 또는 그린 뉴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역행하면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를 증폭시키는 물론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친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국경조정’이다. 탄소국경조정이란 수입품과 수입업체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해외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탄소누출을 방지한다는 논리다.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업체에 배출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그린 딜을 발표했지만 이미 2018년에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에 역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2020년 7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2023년에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이 먼저 탄소배출 비용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면서 탄소집약적 수입상품에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송부문 대책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다수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르웨이는 203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설정한 후 202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선언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이 54.3%에 달했다. 영국은 2030년부터,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벡주는 2035년부터,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대세가 됐다. 개도국의 내연기관차 시장이 커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도국들에서 굳이 내연기관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후발주자의 이익으로 전기차로 바로 가는 도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계 시장에,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각국의 정책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RE100은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특정 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나서는, 2014년에 출범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의 소비 전력은 세계 전체 소비 전력의 절반에 이른다.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바꾼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변화시키면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RE100을 시작한 2014년에 13개였던 참여 기업수가 2021년 2월 현재 288개에 이른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기업 평가나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RE100 선언 자체가 기업의 브랜드이미지와 연결될 뿐 아니라 RE100 참여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도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RE100은 세계 시장을 바꾸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GDP의 37.5%에 이르는 데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 내외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탄소국경세 부과나 RE100 기업 증가는 갈수록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경제활동은 탄소중립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과거의 에너지체계나 사회질서에 머무르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홍수, 가뭄, 대규모 산불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됐다. 2019년 겨울에 발생해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논란의 여지없이 인류 그리고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 상황이다.

파리협정,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 요청

이상기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여러차례 있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제출을 요청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 1.5℃ 제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제로 달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 따라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로 우리에게 익숙한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의제가 부상했다.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겠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정부는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 비전 발표 이후, 그 당위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다배출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등 우리의 경제·산업구조하에서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시각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는 필수적이다. 미국,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확산되는 등 국제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 지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적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고탄소 사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금융위기 이후 줄곧 증가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정점을 찍고 감소

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7억 300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배출량 통계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이러한 감소세를 가속화할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2021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2050 배출전망, 감축 잠재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문별·시기별 감축경로를 마련 중이다. 작업반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중기 감축목표로서 2030 감축 목표 상향도 추진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지방정부도 탄소중립에 동참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는 작년 7월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참여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의 탄소중립 선언, 국내 민간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산업계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이다.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이유진 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우선순위를 두는지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제25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감축목표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천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2010년 감축목표대로라면 2020년 한국의 배출량은 5억 4천300만 톤이 되어야 하지만, 2019년 배출량은 7억300만 톤이다. 목표를 달성 못 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방법을 찾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 목표치를 수정하고 법의 시행령을 바꿔왔다. 2018년에 수립한 현재의 목표도 달성이 불확실하다. 우리사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려면 이행·점검·평가·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총괄 주체가 각 부처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030 감축목표 상향조정, 온실

가스 감축과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집행이다. 향후 30년간의 장기계획, 10년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표 공유해야

우리는 올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올 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한국 사회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과 시민들이 탄소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습하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을 정하고,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에 주류화한다.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업, 흡수원 확대 정책의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 모니터링, 보고,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일도 시급하다.

셋째,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시기별 감축경로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마련은 왜 이전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왜 한국이 온실가스를 못 줄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탄소중립목표 달성은 에너지 전환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를 연계한 전력망 운영에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세금과 가격제도에 반영해서 기술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감축도 필요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제도 개편, 에너지 요금과 세제개편 등이 핵심이다.

다섯째,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녹색금융 제도 기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기후 리스크 관리, 기후·환경 공시제도,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여정에서 약한 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별 산업별 실태조사,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당분간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탄소중립과 기존 화석에너지에 기반을 둔 관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석탄발전소, 신규 공항 건설, 무착륙 국제관광 허용 등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정책들이다. 올해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준비함으로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각종 개발 공약 대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대결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50 탄소중립 시대 준비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



김지효 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탄소중립(net zero)은 온실가스 제거·흡수량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탄소중립 논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파리 협정으로부터 출발한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 경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2018).

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중·일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은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다. 그 일례로 '탄소국경세'를 들 수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부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후보 시절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

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위시한 일련의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그린 뉴딜 현황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면서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2018년 동안 연 1.3% 증가해 2018년 7억2천760만 톤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년 2천500만 톤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또한 석탄화력 등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낮은 편이다. 2021년 1월 전기·수소차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0.6%를 차지하는 데 불과해,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작년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42.7GW 보급, 노후 임대주택 22.5만

호 개선, 전기차 113만 대·수소차 20만 대 보급, 아파트 500만 호 대상 AMI 보급 등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린 뉴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켜 저탄소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초점이 옮겨간 만큼, 그린 뉴딜의 비전과 정책과제는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을 뛰어 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 및 전력화를 극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한 전력을 공급하며, 전력화가 어려운 부분은 수소와 바이오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상호 통합·연계되는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으로 귀결된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청사진을 설정하고, 관련된 기술개발과 정책과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 뉴딜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술·시장·제도를 아우르는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책으로 탄소중립 의제를 활용하면서 과감한 녹색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시스템을 준비하고 녹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관련 국회의 논의

2020년 9월 24일 제21대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러 결의안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당파를 초월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회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했고, 이후 G20 정상회의 및 유엔 등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부응했다.

제21대국회는 결의안 채택에서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입법과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회의 논의 현황을 (1) 2050 탄소중립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2) 2050년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3) 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 및 조세 개선 방안, (4) 수송·건물·에너지·농업 등 분야별 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

첫째, 2050 탄소중립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위임되어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 탄소중립목표로 법정화할 경우, 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해 향후 불가피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기본



이혜경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의 관련 법정 계획의 수정 논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목표의 법정화 논의는 복잡한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상임위원회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관은 정부위원회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심사 중이다. 또한 동 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 관련 주요 법률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및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발전적 통합·해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셋째, 2050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 및 조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률안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소감축인지제도의 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은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수송·건물·에너지·농업 등 분야별 탄소중립 이행 방안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종식과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의 국가적 책무를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업이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시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목표의 국내외 선언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회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의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 보여준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촌의 미래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Q. 농해수위 간사 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주시오.

A.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조합과 지자체 간의 협치모델 구축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협치모델 사례를 유형화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업 분야 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빈번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

산량 감소는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겠습니다.

셋째, 식량자급률 법제화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매우 낮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습니다.

넷째,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산물 및 천일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 법률안을 제20대국회에 이어 재발의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현재 농해수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20 농·어업인 의견조사'를 보면 농어업인들의 위기가 깊어 그대로 드러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4차례에 걸쳐 총 42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은 사실상 외면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현안입니다.

또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충하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재보험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도 시급합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과 수입보장보험의 확대 등 직접적인 소득안정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Q. 지난해 농해수위가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농·수·축산인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긴급 융자지원으로 재해 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과 특별재난지

역 농축산 경영자금에 대해 1~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융합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업분야 금융지원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 수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1%금리의 수산업경영회생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어업인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금리를 1년간 0.5%로 인하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으로 지난 3차 추경에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1천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1년 본예산에 1천3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2020년 법안처리(반영)율 1위(41.5%), 법안처리 건수 2위(400건)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통계, 2020년 전체)인 모범 상임위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해양경찰법 개정안'과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어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선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농해수위는 여야가 따로 없이 화합이 잘되는 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 간사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농해수위 야당 간사이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은 지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과 정직, 정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직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온화하고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선배 의원이기도 합니다. 여야의 극한대립보다는 협치로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의원입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협치와 소통으로 열악한 농어업 환경 개선에 힘 모을 것”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Q. 농해수위 간사 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지난해를 묵묵히 버텨주신 우리 농어업인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농어업인 여러분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을 통해 각종 농어업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농어민의 영·어농 활동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수산물 소비,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각종 가축·과수 전염병까지 농어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 한해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보장과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 그리고 가격안정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해 농어업 주요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인재풀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며, 주기적인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개최로 농정현안의 공론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회 각종 활동을 통해서

도 농어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예산과 법안 그리고 행정적인 분야에서 부처 간 원활한 지원과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농해수위의 가장 큰 이슈와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매년 역대급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계에서 우려하던 대로 3%의 벽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갈수록 보상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등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채 시행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 동안 도농 간 소득 비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농어업인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당 제도와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최저가격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지난해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과 가치 보전을 위해 국가책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Q. 지난해 농해수위가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지난해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공익직불

제는 국회와 농식품부, 농업계 등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얻어낸 성과물이자 농정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국내 농업경영인 중 0.5ha 미만의 소규모 재배가 60%에 달하는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발작물 재배농가의 지급단가를 상향해 논·발작물 재배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었고 올해 시행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를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 간 보험료를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고려해 농업재해보험과 재보험금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 3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추석과 설을 맞아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 결과 코로나19로 힘겨웠던 한 해를 보내신 농어민께 가문의 단비처럼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농해수위는 여야가 따로 없이 화합이 잘되는 위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당 간사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농해수위 여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오랜 기간 도의원과 군수를 역임하시며 쌓으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농업·농촌에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항상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시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의 농어업에 대한 애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임진완



수원화성 화홍문 앞에서

효와 애민정신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도시, 수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갑

문화의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성곽도시인 수원은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세운 계획도시다. 또 예부터 삼남(三南)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수원은 서울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해 왔다. 경기도의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인 수원 갑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을 만나 그의 지역자랑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방화수류정, 행리단길과 더불어 인기



김승원 의원은 취재진을 가장 먼저 수원화성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으로 안내했다. 방화수류정은 수원화성 화홍문의 동쪽에 인접한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정자로, 1794년 수원성곽을 축조할 때 세운 누각 중 하나다. 공식 명칭은 ‘동북각루’지만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닌다”라는 뜻의 방화수류정으로 불리고 있다. 독특한 평면과 지붕모양 때문에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 수원화성에서 가장 뛰어난 독창적인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방화수류정은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자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 언덕 위에 정자가 있고, 정자 아래에는 용지라는 못이 있다. 경치가 아름다워 조상들은 용지에 비친 달을 감상하는 낭만을 수원팔경의 하나로 선정했다”며 “수원은 200년이 넘도록 성이 온전히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는 성곽도시로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수해도 거의 없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인근의 행궁동 카페거리와 수원통닭 거리는 ‘행리단길’로 불리며 관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조대왕이 세운 계획도시, 수원화성



수원의 으뜸가는 자랑인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팔달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부친인 사도세자가 당쟁으로 뒤주 속에서 죽음을 당하자 정조는

만석공원 저수지





화성행궁의 화령전
윤한각(사진 왼쪽)과
정조대왕 어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유해를 새로운 명당인 화산(현 화성시 안녕동) 현릉원(용릉)으로 옮겼다. 이어 화산 아래에 있던 주민과 관가를 팔달산 아래로 집단 이주시킨 뒤 축성공사를 시작해 수원화성을 완공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화성은 성곽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성문, 누대 등 건축 양식이 동양성곽의 웅대함과 서양성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 당시 화기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축성된 성곽”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의 행차 시 거처하던 임시 궁궐인 ‘화성행궁’은 수원화성과 함께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정조대왕은 1789년 10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으로 옮긴 이후 1800년 1월까지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원 행차를 거행했으며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렀다. 1795년에는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는 진찬연을 여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했다. 화성행궁은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공원인 만석공원은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1795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정조대왕이 황무지 위에 조성했으며 이후 쌀 1만 석이 더 생산돼 ‘만석거’라 불리게 됐다. 일제 강점기 때 ‘일왕 저수지’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옛 이름을 되찾았다. 김승원 의원은 “공원 둘레길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해마다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주민들의 산책 장소로 인기만점”이라며 “현재 시멘트로 돼 있는 길을 보다 걷기 편하게 테크길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과 남북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승원 의원은 지역 내 영동선 확장 공사와 관련,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에 참석, 학생들의 학습권·조망권·건강권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학교 중 도로와 10m 근접한 곳은 동원고를 포함해 2곳”이라며 “도로 옆 학교의 소음관리 기준을 현행 55dB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내년부터 120만 인구의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데 보탬이 된 것을 보람있던 일로 꼽았다.

수원 토박이로 판사,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품위 있는 언행과 예의 있는 태도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문체위를 상임위로 선택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이 금방 펼쳐질 것 같았는데 요즘 잘 안풀리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뽕뽕 언얼음장 밑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방법은 문화와 체육을 통한 교류”라고 강조했다.

“정치(政治)는 말 그대로 바른 마음과 바른 몸가짐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궁핍하지 않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남북 문제도 제 임기동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뛰겠습니다.” 🍵

경기 수원 | 글 김영선 사진 유윤기

동원고 민원간담회에서 지역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승원 의원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를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3월호 ‘청찬합시다’ 주인공은 류호정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김영호 의원은 “젊은 패기와 당찬 모습이 눈에 띄었다”면서 “대기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치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류 의원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누구와도 항상 밝게 대화를 나누시던 모습을 보며 국회와 지역 상관없이 ‘호감 가는 정치인의 표상’이라 생각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92년생,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제21대국회 최연소 당선자이자 헌정사상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이자 류호정 의원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게임 개발회사를 다녔으나 성희롱, 성추행을 ‘사회생활’로 여기는 부당한 사내문화에 목소리를 내다 해고를 당했다. 이후 카카오, 네이버 등 IT업계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서 선전홍보부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나섰다. 정의당에서는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총선에서는 정의당 청년할당제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살면 된다. 대학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삶에 응했던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회사에서 떨어진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했고, 근무평기도 곧잘 받았는데 사내에서 발생하는 그릇된 문화를 ‘사회생활로 여기라’는 낡은 가르침은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해고 이후 정의당에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여의도 입성 이후 줄곧 주목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시장 조문 거부 논란에 ‘나 하나쯤은

피해자 편에 서도 괜찮다'며 목소리를 냈고, '탈권위'를 외치며 붉은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에 참석해 '복장 논쟁'을 빚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대기업 저격수로 맞서면서 사과를 받아냈다. 또 강간죄 구성요건을 '피해자 동의 여부'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화제가 됐다. 법안에 관심을 호소하며 100장의 노란색 대자보를 국회에 붙이기도 했다. 채용 비리 처벌 관련 법 제정, 포괄임금제 폐지, 월성원전 맥스터(사용 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론화 조작 의혹 진상 규명 등 청년 및 노동 문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약자를 위해 목소리 내야

류호정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당장 타격 입을 약자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 일자리 없어 생활이 막막한 청년들,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살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류 의원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 순간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만큼 권한이 없는 분들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가을부터 전담적인 에너지를 쏟았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이에 공감하는 많은 지지자 분의 의견을 오롯이 법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불사했던 유족들과 나눴던 대화는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되새기게 했고 여전히 제게 큰 힘이 됩니다.” 🍵



“이탄희 의원을 칭찬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안 발의 및 통과를 이끌어내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을 칭찬합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를 위해 함께 활동하며 옆에서 지켜본 이 의원님의 뿌리 깊은 초심과 확고한 신념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 확립을 이끄시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 전 판사 탄핵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만인에 평등'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지원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



박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시 강남구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3선을 한 후 정치권을 떠났던 박진 의원이 8년의 공백 끝에 화려하게 여의도로 돌아왔다. 박진 의원을 만나 그의 좌우명과 그간의 활동,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진 의원의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진인사대천명’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한 말로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에서 유래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어렸을 때 의사이셨던 아버지로 부터 늘 들으면서 컸던 가르침입니다.”

경고과와 서울대를 졸업한 박진 의원은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했다. 그 후 국비유학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002년 제16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박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떠난 8년 동안 박진 의원은 한국외대 석좌교수로 지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열었다.

“젊은 학생들과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의회외교에서 역할 기대

제21대 총선에서 강남구을에 출마해 승리를 거둔 박진 의원은 주택문제와 교통, 교육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으로 꼽았다.

“세곡동에 강남보급자리 지구가 조성돼 입주한 지 8년가량 지났지만,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공공임대주택에 그대로 반영돼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례과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족과 노후화된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강남구를 지역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입니다. 잘 개발하면 서울의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곳이기에 할 일도 많고 그만큼 보람도 더 큰 곳입니다.”

제18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카운터파트 격으로 만나 한미 관계, 대북정책, 중국·일본과의 관계 등을 논의했던 인연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도 두터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



2008년 7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 직무실에서 조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현 미국대통령)과

으로 알려져 박진 의원은 의회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증명하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박 의원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미의회외교포럼 공동대표에 임명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한민국의 외교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옹호,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그동안 불협화음을 냈던 한미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일본과는 장기화된 교착상태를 조속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박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초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키 위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정치는 서비스, 새로운 정치 아닌 필요한 정치를 해야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을)

아나운서 출신의 한준호 의원은 다채로운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방송국 아나운서, 청와대 행정관, 스타트업 대표를 거쳐 제21대국회 초선의원인 그는 환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갖춰 얼핏 화려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생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한준호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년시절 군인이나 조종사를 꿈꿨다는 한준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입대했다. 제대 후 돌아간 집은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문이 잠겨 있었고 부모님과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는 군 생활을 했던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며칠간 노숙을 하며 숙식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방배동의 신문배급소에서 10개월간 일했다.

이후 항공사에 고졸 계약직 사원으로 취직한 한 의원은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단순 업무를 하는 동안 조종사들의 대학이나 전공을 적으며 나도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그는

숙식이 제공되는 주유소에서 일하며 과외, 커피숍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게 우선이었던 그는 공기업인 데이콤ST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했고 대학교 때 만난 아내와 결혼도 했다. 데이콤ST는 1년 뒤 민영화돼 그는 지금의 한국거래소인 코스닥증권시장으로 이직했다.

“그때 애널리스트로 통계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실에서 언론 인터뷰와 시황 방송을 맡았는데, 시황 방송을 곧잘 해서 주변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를 해보라는 권유가 많았어요. 고민 끝에 7개월간 시험 준비를 해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는 MBC 주말 뉴스 앵커를 비롯해 본인의 이름을 단 프로그램인 ‘쇼바이벌’, ‘닥터스’, ‘퀴즈마스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의학 드라마 ‘뉴하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겨울 MBC 총파업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이후 두 번의 징계를 받아 기획사업부와 정책기획실 등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때 이후 9년간 방송활동을 못했습니다. 2018년 MBC가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방송을 할 줄 알고 설렸는데 어느새 방송 대신 보직을 맡아야 하는 경력이 됐습니다. 방송 복귀를 앞두고 세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자동차로 하루에 600km를 달리며 잠은 에어비앤비에서 잤습니다. 아내와 경력단절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뒤 2018년 초 방송국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방송국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2010년 ‘아빠가 읽는 임신출산 책’ 및 ‘가자, 싱가포르’를 출간하는 등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디어 진흥 발전 초석 만들고파

한 의원은 아나운서 시절 국회 대관 업무를 했던 경험

으로 의원들에게 스피치 컨설팅을 해줬다. 그게 입소문이나, 2018년 우상호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고 같은 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운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보좌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9년 2월, 행정관 퇴임 후 도시재생 비영리법인 ‘새로 지음발전소’를 창립했다가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자신이 18년 가까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정치는 다각적인 고민 끝에 시작했습니다. 2008년 MBC언론노조 집행부로 일할 때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여당이 갖는 힘,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요. 정치 입문에 대해 한참 고민할 때 친한 선배가 ‘정치는 권위적인 배분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후 힘의 한계를 느끼지만 언론 분야의 공정성을 위한 개혁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 의원은 “지역 현안도 의지만 갖고는 안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4년 임기 중 중점 법안과 지역 현안 한 개씩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특히 사장 선임과 사장 자격요건의 문제, 미디어 진흥 발전에 관심이 많다.

한 의원은 “지금 사회는 SNS 등의 발달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필요한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정치는 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보다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나 자신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팀플레이가 잘 되다 보면 정치인 한준호도 드러나고 언젠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글 김영선 사진 유윤기

손상 예방,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제정의 필요성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손상으로 인

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경준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손상 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손상 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발표하고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한

후,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손상예방 관리법 제정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 손상 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과제 토론회

이용우·조응천·민형배·오기형·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3일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항공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기업결합 관련 쟁점, 과제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경우 노선, 점유율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LCC(저비용항공사)의 보유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개를 합치면 공급석 점유율이 72.9%”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단거리를 나눠서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별 노선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선 간 대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점유율이 낮아도 황금시간대 공항 슬롯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기환 항공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경험하지 못한 항공시장 변화로 독과점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려되는 소비자 편익 저감 등에 대한 사후 정부 규제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 준비도 병행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는 자본시장의 주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지위 및 발전방향, 독과점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문제 등 많은 쟁점이 있다”며 “항공산업 수익의 결정적인 변수인 국토교통부의 노선 배정 등 정책 변수들을 검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김주영·박상혁·이탄희·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이은주 의원(정의당)은 2월 3일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단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 도시철도, 용인 경전철, 서해선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전철 민간-다단계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토론회는 경전철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영화 추진과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조연민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위탁’이 마치 정해진 규범적 ‘표준’이라는 착시가 들 정도라며 “민간 위탁에서 공공성 담보의 어려움, 노선별 운영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통합성 저해, 동종 산업에서의 수직적·수평적 근로조건 격차 발생 등 운영 구조가 중층적인 만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도 중층적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철도운영과 같이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서 최저가 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업무에서 비용절감을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삭감된 운영비용 수백억 원이 결국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돌아왔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는 기계장치 결함과 운영기관의 비상대응 부재가 겹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그동안 제기된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결국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전철의 다단계 위탁 운영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경전철의 다단계 위탁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더 공공적이고 안전한 시민 교통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토론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2월 5일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투자 1천894억 원, 경남도·창원시 재정 634억 원 등 총 2천648억 원을 투입해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건설 당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최소수입보장제도(MRG)가 10년 넘게 재정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

마창대교는 교통 혼잡이 심한 시가지 도로를 거

치지 않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적자분을 보전해야 하는 최소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 받는 민자도로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천500원으로 km당 요금(1천471원)이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1천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 울산대교(1천43원)와 비교해 비싼 편이다. 내년에는 통행료가 3천 원으로 인상된다.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주거여건을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출퇴근시간에 통행량이 많은 마창대교의 특성상 탄력요금할인제 등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며, 통행료 인하시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로용량 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재정부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협의”라며 “만약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준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변요금제’ 중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미국 체스피크 익스프레스웨이, 프랑스 파리 A14 도로, 영국 M6toll 도로 등이 통행 방향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하거나, 주중보다 주말에 2배 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주말·평일 출퇴근 때와 평일 한가한 시간대 요금을 달

리하는 방법으로 가변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마창대교는 통합창원시의 도시교통정비 계획상 내부순환도로망에 속하는 주요 도로인데도 통행료가 높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관청 등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8일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스포츠포트를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포트 코리아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해 스포츠포트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e스포츠의 스포츠포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야구·축구·농구·배구·경륜·경정 등의 경기 중단 및 축소로 스포츠포트 판매가 급감하면서 체육재정 손실이 가중되는 반면, 고용지원 등 사회보험성 지출 증가로 체육진흥 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e스포츠는 코로나19에도 비대면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토토의 수요층을 젊은 층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스포츠 리그를 e스포츠나 바둑·당구 등 비대면 스포츠가 대체하고 있고 대중의 관심과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고전적인 스포츠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요 창출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스포츠토토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도 논의됐다. 이민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장은 미성년자 부정·불법행위 및 불법시장 확산 방지책 마련, e스포츠 종목과 리그 운영 안정성 문제, 기존 발행 종목에 대한 법정 배분금 축소 우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승부조작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정훈 LCK 유한회사 사무총장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다.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 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9년간 LCK 리그를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현 의원은 “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e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

강득구·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9일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후속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충분한 학습과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교육보다 학교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지원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의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교사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교육제도의 개혁,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안착,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 정서 측면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강조됐다.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 내 전면등교를 실시한 학교의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며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곳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공동체 역

할을 다하며 학교 전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격차가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시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초학습 부진은 정서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학습에 접근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보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이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기초학력 교사를 확보하고 해소해나갈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인사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

우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거나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줘 실제 산재사망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외에 산재 감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도 논의됐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이 불거져 나온 것은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재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행정, 사법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산재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운동,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재해조사와 대응 역량 강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정홍준 서울과학대 경영학 교수도 비슷한 취지에서 정부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는 산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인력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시적인 산재 모니터링 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 등을 촘촘히 살피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리 윤성혜



국회, 본회의 열어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법안’ 등 안건 의결

국회는 2월 26일 제384회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6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이 미혼부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

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범위가 확대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다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중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지적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현행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

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아동의 권익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안’(법제사법위원회)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었다.

제정안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했다. 또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해 처분의 재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제정으로 일선공무원과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대상에 전범 기업 등 비윤리적 기업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서 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해 우리 국부펀드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했다. 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현행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했다.

아울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무자가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기 전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누락 파악과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협력 부담 및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기준소득금액 1억 원 미만으로 한정)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2020년에 한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1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

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 원의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됐다. 지난 2016년 인권위가 각 대학에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2020년 초 기준 238개 대학교·대학원 중 약 37%인 89개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다. 더불어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이 강화되고,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

한 전문기술석사 과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현재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권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됐다.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졸업한 사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

법률안은 예산부족으로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의 사용 문제등 학교 시설·설비·교구를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범죄수사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일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날 이후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절차를, 사법경찰관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내역이 정보주체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하도록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두도록 수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이 범죄를 수사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실을 통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내 정비가 필요한 다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을 조정,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 적용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를 정의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상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돼 직위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위해제된 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이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대 대원의 직위해제 이후 경찰의 불송치가 있는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해 준다는 예외 규정은 신설돼 있지 않아 개정됐다.

개정안은 의무경찰대 대원이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두 기관의 이원체제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및 운영성과 저조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어린이문화원 운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창·제작 업무의 효율성과 기관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광업공단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3조 원으로 하며,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해외자산계정을 두는 한편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제정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카지노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총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어, 카지노업자의 폐광기금 납부 방식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동일하게 하는 한편 폐광지역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법률

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또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고,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이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특별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3년)과 달리 5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등 지진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대유행, 생화학테러, 방사능 누출사고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제품의 신속화가 및 개발지원을 통해 필요한 제품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것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공급 체계의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는 해당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또는 긴급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제품 전반을 총괄해 해당 제품의 신속 개발 및 긴급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 심사·조건부허가 제도 등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

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중보건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가능성으로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가 단순위헌결정(2017헌가35, 2019헌가23)을 받은 바 있어 국회의 개선 입법이 시급히 요구돼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자율심의 기구는 의료기기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심의한 광고를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광고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철저한 방역 관리와 예방접종 준비가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적·악의적인 감염병 방역·예방 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기존의 백신·의약품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체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관련 업무를 중과실 없이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실 전용 주차장에 선별진료소, 사전환자분류소 등을 설치하거나 응급실 전담 전문의, 간호사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근무하는 등 응급의료기관들이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적정온도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지정기준을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구급차의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응급의료기관이 대응해야 할 필요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호 충돌하는 모순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급의약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관리 취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구급차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헌혈자 수와 혈액 보유량이 감소해 헌혈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종이로 한 번만 발급되던 헌혈증서의 재발급을 허용하고, 재발급 받은 헌혈증서로 혈액제제를 이중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문자전송과 전자우편을 통한 헌혈증서 발급을 허용하고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헌혈증서 활용도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해 헌혈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현재 부정청약인 줄 모르고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시행사는 계약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계약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주택공급계약 취소 전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해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번 특별법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해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 간소화를 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이 극심해 디지

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허용,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등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은 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한편,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수집을 통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인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해 그 결과를 비용지원에 연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적절하게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의 책임감을 확보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에서 택배 및 퀵·배달대행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을 의결했다.

택배산업 규모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6.3조 원으로, 2008년 2.3조 원과 비교해 연평균 약 10% 성장했고, 물량은 27.8억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소화물배송대행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도 지난해 3/4분기 거래액이 4.7조 원(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에 달할 정도로 소화물배송대행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으며,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배서비스나 퀵·배달대행서비스 등 새로운 화물운수업의 양상을 담지 못하고, 화물자동차의 공급 및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와 사망사고가 있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하고 종사자 보호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이지민 전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기존 화물운수업의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택배서비스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별도의 체계로 독립시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4개 화물업계 단체와 국회, 정부 간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택배전용차량인 ‘배’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택배서비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는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인증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택배서비스사업과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현행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활동이 가능하고, 이륜자동차 외에도 현재와 같이 도보·자전거·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며, 향후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이 소화물배송

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셋째,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간의 운송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해 종사자 보호를 강화했다.

넷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표준계약서에는 분류업무의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들도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은 택배사업자, 택배서비스종사자, 화물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부단한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률 제정을 첫걸음으로 해서 향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중국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 평가와 전망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¹⁾에서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이하 '14·5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시행될 '14·5 계획'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²⁾ 달성을 마무리하고, 신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또 하나의 100년, 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경제를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4·5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

첫째, 내순환-외순환의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이다. '14·5 계획'은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목표로 했던 '13·5 계획'과 달리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 등에 대비하여 쌍순환 구도에 기반한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전면적인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술고도화를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순환 우선, 외순환 병행' 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과 기술자립 강화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중전회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15차례나 언급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향후 14·5 계획 기간에는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 축소 및 디지털 경제 성장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육성보다는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 탈피를 위해 정책의 초점이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정밀기계 등 핵심기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녹색성장과 에너지 전환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1월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14·5 기간 동안 비화석 에너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中全会)를 의미

2) 온포사회(溫飽社會,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기반으로 인민들이 일정 수준의 문화생활까지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 도달한 사회를 의미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

지 사용 비중 확대 등의 목표치가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G2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미·중 간 기술 단절이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제약을 자체 혁신능력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14·5 계획’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을 통한 기술자립 강화라고 할 수 있다.

‘14·5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5 계획’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통해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지금의 2배로 늘려 명실상부한 중진국의 반열에 오르겠다고 공언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³⁾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⁴⁾

는 2028년 중국의 명목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⁵⁾도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을 8.2%로 예상했다.

과거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14·5 계획’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여, 중국이 내수시장을 견고하게 만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디지털, 인터넷, 녹색성장, 언택트 산업 등에 있어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고려하면 ‘14·5 계획’의 목표 달성이 반드시 희망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우선, ‘14·5 계획’의 핵심인 쌍순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확대가 필수적인데 현실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가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 프로젝트나 공공시설 투자 등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누적된 지방정부의 부채수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에서 제시된 ‘14·5 계획’의 세부과제 및 목표 지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성급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을 거친 뒤, 3월 5일에 예정⁶⁾되어 있는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 및 통과를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인바, 어떠한 성장률 목표와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

글 김현중 국회 중국 주재관

3) 경제경영연구소 연례보고서(2020.12)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 경제 전망 보고서(2020.12)

5)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2020.10)

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2020.12.26.)에서 2021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위기의 양봉산업을 살리는 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한 해 국내 꿀 생산액은 5천620억 원(2019년 기준)이지만 꿀벌의 화분수정 매개체로서의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이라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여 종의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생태계의 유지·보존이라는 양봉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9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을 통과시켰다.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세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현황, 전망, 지원방

향 및 목표, 중장기 투자계획,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양봉산업법’ 통과에 대해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전국 4만여 양봉농가의 숙원이었던 법이 통과됐다. 국내 양봉산업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황 회장은 “그간 양봉산업은 독자적인 법이 없어 ‘축산법’ 적용을 받았다. ‘축산법’은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의 법이라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봉산업법’은 또 농식품부 장관이 종합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박홍식 과장은 “3월부터 ‘양봉산업 실태조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수한 꿀벌 품종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 문을 연 ‘꿀벌 위도격리 육종장’에서 꿀벌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꿀벌은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수벌과 다중 교미하기 때문에 우수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다른 꿀벌이 없는 섬처럼 격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그동안 격리된 전문 육종장이 없어 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품종 개발 뒤에도 체계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3만 6791㎡ 면적의 격리육종장에는 연구동, 사육사 등 시설이 있으며 연구동에는 꿀벌 인공수정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양봉농가가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큰 변화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다. 이 법에 따르면 양봉농가는 빠짐없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두 가지 종을 혼합 사육하는 경우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등록하지 않고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박홍식 과장은 양봉농가 등록과 관련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가 실태를 파악하고 양봉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양봉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밀원 부족 및 농가 갈등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은 “양봉농가는 수시로 벌통을 움직이다 보니 남의 땅을 빌릴 때가 많다. 농가 등록을 하려면 토지 임대계약서가 필요한데 임대계약서가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꿀벌농장에서 밤꿀을 채밀하는 모습

없는 일부 농가가 등록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임대계약서를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나 사용승낙서로 대체 해주고 등록 기한도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올해 8월 말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2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는 그는 “법 시행을 통해 양봉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지만 양봉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양봉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나무 냉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급감해 많은 양봉농가들이 꿀벌에게 먹일 먹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날씨에 따라 농가의 소득 변화가 큰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양봉 관련 업무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법도 시행된 만큼 양봉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양봉과가 신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0-11-26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020-12-02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북한 귀순자 관련 상황 보고 등 실시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면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안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결국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윤영석 위원(국민의힘)의 질문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킷’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그렇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대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북미협상 재개시 필요한 접근법’에 대해 묻자 “(북미가) 비핵화의 최종 단계, 최종 모습에 대해 합의하고,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단계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미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선은 북미 간에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해야 한다”며 “협상의 출발점이 어디

냐에 대한 양국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위원(국민의힘)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핵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이라며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우리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 문건은) 전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월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문화뉴딜’과 관련, “국민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문화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도 문화뉴딜 정책이 핵심 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생활자금 출처 논란, 본회의 중 여행 등이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생활비 60만 원’과 관련, “생활비를 6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 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본회의에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을 한 것과 관련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또한, 황 후보자 보좌관이 지역구 주민 익명 채팅방에서 주민 행세를 하며 황 후보자를 두둔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제 보좌관이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다”며 사과하고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가 2011~2015년 미국 유학비로 연평균 2천700만~5천만 원을 썼고, 씨티은행 국내계좌 예치금을 인출해 썼다고 했는데 이 기간 송금내역이 전혀 없다”는 김예지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배우자의 친언니가 바로 앞집에, 제 동생도 인근에 살고 있었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을 두고도 여야의 태도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전문성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 소통 능력”이라고 한 반면 김승수 위원(국민의힘)은 부처 업무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문성은 고사하고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북한 귀순자 관련 상황 보고

2월 17일 열린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경계 실패”라는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경계실패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 과오가 크다. 현장에서 경계 작전 병력들의 집중과 그를 지휘하는 저를 비롯한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좋아졌는데도 경계 실패가 왜 빈발하느냐”는 이채익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엄정한 작전 기강과 매너리즘 타파 등에 대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 남성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묻는 신원식 위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초기 합신(합동신문)에서 민간인이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북에서 넘어오려면 10km 정도를 헤엄쳐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수영해서 온 걸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한기호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가장 실제적인 위협은 북한”이라고 답변했다. 🍵

NEWS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제1차 분과회의 개최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월 22일과 24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전략분과회의, 제도화분과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2월 22일에 열린 전략분과회의에서 최아진 위원(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및 주요 인사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정철 위원(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대미 정책 공공외교와 의회'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공공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미 공공외교 방안으로 미국 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발굴, 현지 한인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자문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및 한반도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외교 과정에 앞서 국내 합의를 통해 명확한 공공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책 공공외교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월 24일 열린 제도화분과회의에서는 왕선택 위원(여시재 정책위원)이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내 대북정책 추진기반 약화의 원인이 된 당파적 대북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초당적 대북정책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이행을 합의한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남북간 주요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북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남남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지속적인 역할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박

병석 국회의장이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1월 20일 박병석 의장이 참석한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

白峰紳士賞 施賞式

朝鮮政治文化協會研究會 國會故事堂 2023年 2月 2日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2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을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이광재 의원과 국민의힘 박진·조해진·추경호 의원이 선정

됐다.

라종일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국회가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봉신사상기념사업회장인 박병석 의장이 이번에 베스트10에 선정됐다.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드물고 흔치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2021년 의원 수당 인상분 코로나19 극복 위해 반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연금 각출의 건'을 처리해 올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두 의연금으로 모금하기로 했다.

이번 의연금 모금은 지난 2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예산 책정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모금 방식은 올해 12월까지 의장단 및 국회의원의 매월 급여에서 수당 인상분 상당액을 각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1인 기준, 매월 7만 7천300원씩 연간 92만 7천600원이 모금되며 총 모금액은 대략 2.7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추후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화상으로 개최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lobal Parliament Network, GPN) 회의’가 2월 9일, 10일 이틀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본래 매년 2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69개국 268명의 의회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각국 의회 대표들은 ‘변혁적 경기 회복’을 주제로 경제·사회·환경적 진전을 위한 합의 구축,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 방안,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월 10일에는 백신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의료체계의 복원력,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문제를 의제로 회의를 이어나갔다.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 개최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의회연맹(IPU) 및 유엔(UN)이 공동으로

NEWS



주최하는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Annual Parliamentary Hearing at the United Nations)'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UN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제75차 회의에서 처음 화상회의 방식을 채택했다.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UN본부(미국 뉴욕)에서 개최해왔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 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으며, UN 회원국 총 70개국에서 300여 명의 의회 대표가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의제인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에 대해 각국 의회 대표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했다.

조태용 의원은 'UN부패방지협약의 기본 토대 구축과 이행 과제' 세션에서 한국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부패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반부패 척결의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함을 역설하면서, 반부패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UN 총회 중 의원회의'는 2월 18일에도 개최돼 성인지적 반부패 정책, 자산공시·내부고발자 보호 등 주요 부패방지 방안 관련 의제로 회의를 이어갔다.

국회도서관, 대전시립미술관과 MOU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5일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선승혜)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미래지향적 과학예술의 전시 등 문화 공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며, 이에 예술 관련 콘텐츠와 시설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해 미술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력 사업으로 예술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한국 문화의 '어제, 오늘, 내일'을 조망하는 '21세기 한국미술+미래(가칭)'를 기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영상 미디어 작품전시와 국회도서관 소장 한국화 전시, 인공지능(AI)과 예술을 주제로 한 청년작가 출품작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된 예술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개발에 대한 협력 체

계를 구축하고 국회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은 2월 16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 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은 36.8%에 지나지 않는 등 지원이 부

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 규정의 의무화,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IMF 연례협의단 면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월 20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IMF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연례협의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 및 정책연구기관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IMF 연례협의단 면담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임익상 처장은 ‘장기 재정전망’과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4차례 추경예산을 비롯한 예·결산 분석 보고서 등 지난해 주요 실적을 소개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쓰 구오(Si Guo) 아태국 이코노미

NEWS

스트 등 IMF 연례협의단은 국회예산정책처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및 분석관들과 장기 재정전망, 재정준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제1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이슈(제13호)'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매월 경제·산업분야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망을 수록하는 동향지다.

이번호에서는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1년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복원대책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4.0~5.2%의 성장이 전망됐다. 국내 경제도 완만한 경제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동성 확대에 인한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변동성 증가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적극적 경제 운용, 내수회복, 투자·수출 개선 및 민생 안정 등을 선제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2021년에는 일정 수준의 경제회복과 글로벌 교역 개선이 예상된다. 감염병 사태의 종식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므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더불어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투자·수출 개선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동향 및 시사점' 등 다양한 경제·산업현안에 대한 분석을 수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 공동 온라인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지난 2월 4일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과 제10회 공동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2009년부터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10번째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동 온라인 간담회는 '탄소 없는 사회'라는 주제하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은 일본의 탄소중립정책을 각각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해경 조사관은 '탄소 없는 대한민국'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외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 현황,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관련

주요 쟁점, 국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제·개정 법률안을 설명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마고메 다카시 조사관은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발표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2050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투자 세제우대, R&D기금창 설을 제시하고 전력산업 대응과제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재생가능에너지 송전망 강화, 자동차산업 대응과제로 2030년 중 반 내연기관 판매 및 생산 종식계획, 수소 기술연구개발 과제 등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2일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기초발제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동북아 정세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세 명의 전문가가 쟁점발제를 진행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북아 각국의 각자도생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

국의 대응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 둘째, 미중 경쟁에 대비한 확대관여 정책 추진, 셋째, 동북아 지역주의 기반 다자협력 추진, 넷째, 중견국·유사국 다자주의 국제연대 추구 등을 제시했다.

쟁점발제를 맡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핵 협상보다는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한다면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 주기적 긴장감과 군사적 압박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3불정책' 등을 고려해 우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관계 복원 및 역내 소다자 안보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동북아 경제 질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다변화하고 강건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21세기 무역 규칙의 수립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대 이사회 위촉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월 24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한 이사회 위촉식 및 간담회는 새로 구성된 제2대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사회 임원은 박명광 이사장(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을 비롯해, 강병수(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권남훈(건국대 경제

NEWS

National assembly review



학과 교수), 박진희(동국대 다름마칼리지 교수),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차영환(상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경욱(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한상익(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사 8명과 강경운(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감사로 구성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는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지명 및 교섭·비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 위촉됐으며, 감사는 동 법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임명됐다.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관 변경, 원장 후보자 추천, 연구과제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임 이사회 임원들에게 “미래연구원이 5년 단임 정부가 하기 어려운 과제,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중장기 아젠다를 설정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방향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이 겪은 삶의 변화 연구 결과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삶 변화를 연구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 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 악화 비율이 높고 개선 비율은 낮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지만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의 새 이름을 찾아주세요!

국회 헌정기념관 네이밍 공모전

‘헌정기념관’이 전면개편공사 후 국립박물관으로 2022년 재개관합니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헌정기념관이라는 이름 대신
국민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는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입헌정치의 역사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

- 참여방법**
- 1)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
 - 2) 7개의 네이밍 후보 중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
 - 3)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네이밍과 설명 작성
 - 4) 참여자 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 네이밍 후보 ※—

1. 국회박물관 2. 국회헌정박물관 3. 민주주의박물관
4. 국민의전당 5. 국회이야기 6. 민주주의이야기 7. 헌정의전당

참여기간 2021.3.2 ~ 2021.3.19

시상내역 행운상(5인): 선정된 네이밍에 투표한 분중 추첨
아이디어상 (5인): 추가 네이밍 제안자중 선정
상품: 10만원 문화상품권
*모든 참가자 중 100분을 추첨하여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결과발표 2021.4월 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실 02-6788-2269

사상 첫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개최의 의미와 내용



고상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연간 800~900명 수준에 이르고, 특히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체감도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

대건설)·제조(LG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중공업)·물류(쿠광폴필먼트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대 분야 주요 기업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에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실시해, 산업재해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비중이 원청업체에 비해 하청업체가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 기술 및 설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에서 직접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최근 택배기사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을 증원하고,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시설 확보 및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셋째,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안전투자가 충분하지 않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필수적이거나 근로자가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 바,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방안 마련키로

이날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모별·업종별 안

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설·제조 현장의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투자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지난 2월 25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원청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해 하청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청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산정에 반영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의 보험료 할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지난 1월 8일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약 1년 앞두고 있고, 정부 또한 동 법률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23년까지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이 제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정·경제 분야 정책 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역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박세용

국회예산처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월 16일 2021년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하연섭 위원장 등 14인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올해 재정·경제 분야에서의 주요 화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화두로, 국회가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기업·가계·정

부 모두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같은 부채문제가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부채의 수준과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기본소득 등 지출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재정준칙과 재정총량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등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 전반의 비대칭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불평등지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례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의 비대칭·불평등이 악화되는 경우, 인적자본의 형성이 제약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장기화 될 수 있다. 또한 포용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인프라의 구축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불평등 해소 측면이 고



2월 1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예산정책자문위를 진행하고 있는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왼쪽)과 화상회의 모습

려되어야 하며, 안전한 보육시설·문화인프라 등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는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적비용과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축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위한 투입비용이 큰 반면 그 효과는 20~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와 혜택을 받는 세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 저출산 해소의 사회적인 편익과 개인이 체감하는 편익 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은 저출산 관련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조세제도의 인구 친화성, 인적자본의 적정 투자 수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경제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세제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변화 대응, 전 세계적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준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경제회복 기여하고 국가 미래 준비에 참고”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하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를 도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비대면 회의와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석·연구주제 선정과 보고서 발간심의 등에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함으로써, 보고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회의 안전을 위해 ‘철통방어’ 합니다”



한순금
의회방호담당관실 주무관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떠들썩한 한 해였다. 국회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몇 번의 폐쇄조치가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코로나19 상황대응 시스템으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4천 명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의 코로나 최전선 현장에서 방역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 한순금 주무관을 만나봤다.

Q 언제부터 국회에서 근무하셨나요?

A 저는 2010년부터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누 국가대표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의회 방호라는 특별한 업무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방호 업무는 남성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당시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방호원 4명이 합격했는데, 이전까지는 ‘금녀의 벽’이었던 국

회 방호 업무에 여직원으로는 처음 임용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의회방호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의회방호담당관실은 약 10만 평 부지의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국회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국회도서관, 의정관 등 국회 내 모든 청사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경내·외 각종 상황을 관리하는 국회안전상황실, 국회 각 건물 내 X-RAY검색, 문형·액체 탐지기 등 검색기 운영, 국회 청사 내 방호 업무, 국회 방문자 출입관리 등 국회 전자출입시스템 운영과 국회 경내·외 질서유지,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회

내 코로나19 관련 신고 접수 및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주요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철저히 합니다.

Q 주무관님의 담당업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재 국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사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내 CCTV를 운용하고, 경비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 수집으로 돌발상황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및 내방객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또는 확진자 접촉 등을 신고 받는 국회재난대책본부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업무 고충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CCTV 동선을 파악해 자료를 준비하는데 짧게는 5~8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 안전상황실 업무 중 긴급하게 추가로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매우 크고, 대상자의 진술에 따른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동선 파악이 매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국회 모든

청사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각 청사 출입자들은 자가 측정을 하고 방호직원은 측정된 체온을 확인한 후 청사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측정값이 낱씨, 설치장소, 냉난방기구, 외부환경 등에 의해 조금의 오차 범위가 있기에 국회 안전을 위해 방호원들이 직접 측정을 돕기도 합니다. 때문에 청사방호, 질서 유지 등 본연의 업무보다 체온측정이 주된 업무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 방호담당관실 근무자들 모두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고 싶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야 할 상황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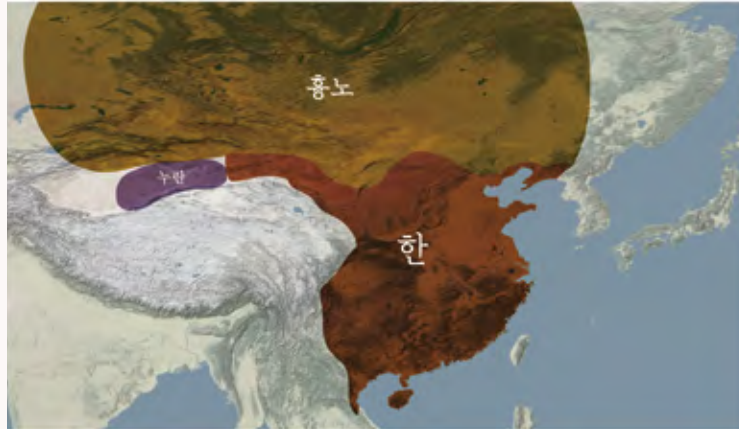
A 의회방호담당관실은 ‘국회 경내·외에서 청사방호·질서유지’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기엔 아쉬울 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하면서 국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 직원,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국회를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누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한 실크로드의 작은 도시국가



실크로드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5개국뿐 아니라 중국의 신장-위구르(신장웨이우얼) 자치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루트를 포함해 중국, 서아시아, 지중해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역 및 이동 루트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실크로드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그 가운데 어떤 국가들은 뛰어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무역과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다른 한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국가들은 외적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다. 누란(樓蘭)은 이러한 실크로드 국가의 전형이었다. 교역상의 이로움과 안보적인 불리함에 직면해 영광과 고난을 함께 겪은 누란의 역사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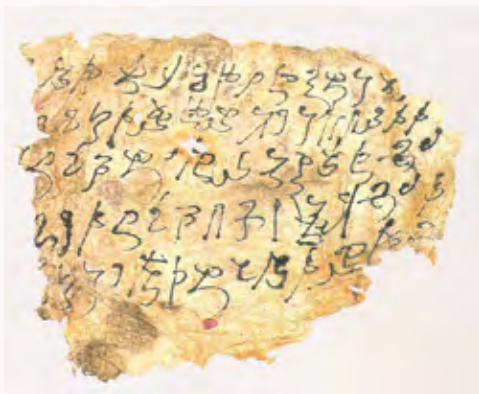
누란 지도

과거 서역(西域) 또는 동(東)투르키스탄(Turkistan)이라고 불리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서부는 타림(Tarim) 분지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과 사막이 복합된 독특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발 3천m가 넘는 고봉들이 즐비한 툽탄산맥과 쿤룬산맥이 북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서쪽 벽을 이룬다. 편서풍이 이들 산맥을 넘어 오면서 극도로 건조한 기후 조건을 만들고, 그 결과 타림 분지 한가운데 동서 지름 약 1천km, 남북 지름 약 400km의 거대한 사막이 형성된다. 이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데, 툽탄산맥과 쿤룬산맥의 빙하가 녹은 물이 모인 것이다. 사막과 산맥이 만나는 곳에서는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을 모아 농작을 하면서 도시가 생겨났다. 고대로부터 타림 분지 주변에 생성된 도시국가들은 실크로드

의 주요 경로상에 위치하면서 인적·물적 교류에 적극 참가했다.

뛰어난 입지조건 갖춘 도시국가, 누란

누란은 이러한 실크로드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타림분지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누란은 서쪽으로는 옥(玉)의 산지로 유명한 호탄(Khotan)과 국경을 맞닿으면서 동쪽으로는 룽노르(Lob-nor) 호수 인근까지 통치했던 동서무역의 요충지였다. 특히 중국 측 역사 기술에 '포창해(浦昌海)' 또는 '염택(鹽澤)'이라고 불린 룽노르 호수는 과거 타클라마칸 사막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타림강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갔던 호수였다. 현재는 메말라버린 나머지 1960년대 중국의 핵실험 장소로 사용됐다. 그러나 6세기 이전까지 룽노르는 둘레 400리(약 160km)에 이르는 큰 호수



카로슈티 문자로 쓰인 누란 문헌



그리스 여신 티케(Tyche)가 직조된 면직물

였다.

현지어로 ‘크로라이나(Kroraina)’라고 불린 누란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룽노르에서 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샤오허(小河) 고분군에서는 기원전 수천 년경의 유물들이 발굴됐다. 특히 2005년 발견된 미라들은 분석 결과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조한 기후 덕에 썩지 않고 보존된 미라들은 외모로만 보면 오늘날 서양인들의 모습에 가깝다. 학자들은 인도-유럽어족, 특히 토하라(Tochara)인으로 알려진 집단이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남하하는 가운데 일부가 그곳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이후 룽노르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문명을 일구었고, 누란이라는 국가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란은 동으로 중국, 서로는 중앙아시아, 북으로는 초원지대, 남으로는 인도를 연결하는 교역의 십자

로에 위치해 있었다. 누란의 뛰어난 입지조건은 20세기 초 이래 그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누란 영토 내 니야(尼雅)나 룽노르 인근 누란 유적지에서 발굴된 목간(木簡)들은 당시 누란, 즉 크로라이나 왕국에서 인도 북부 및 간다라 지방으로부터 수입된 카로슈티(Kharosthi) 문자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자가 직조된 견직물, 그리스 여신 티케(Tyche)가 용과 사자와 함께 그려진 면직물 등을 통해 이곳에 중국과 그리스 문화가 함께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흉노와 한에 등거리 외교정책 펼쳐

그러나 실크로드의 교차로에 있던 누란은 기원전 200년부터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두 나라, 흉노와 한(漢)나라의 대결 구도에 휘말리게 된다. 진(秦)나라에 이어 중국 대륙을 통일한 한나라와 동유럽에서 초원을 제패하고 무력으로 한나라를 압도했

던 흉노는 패권 경쟁을 벌였다. 당시 누란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한 무제(武帝)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면서, 누란은 한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막강한 흉노의 군사력 또한 도외시하지 않았다.

누란의 외교 정책은 이른바 ‘등거리 외교’였다. 왕자를 볼모로 보내야 할 때는 한 명씩 각각 흉노와 한나라에 보냈다. 한나라에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방에 있던 대완(大宛)에 군사용 말을 획득하기 위해 사신과 원정군을 보낼 때 누란은 흉노에 이 사실을 알렸다. 흉노의 반한(反漢) 정책에 따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란의 줄타기 외교는 험난했다.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한쪽의 보복을 받았다. 흉노 측 병력이 한나라의 사절단을 몰아내자, 한 무제는 조파노(趙破奴) 휘하 수만의 병력으로 누란왕을 생포했다. 대완 원정에 나선 이사(貳師) 장군 이광리(李廣利) 군대의 퇴로를 막으려는 흉노 측 병력 파견에 대응하기 위해, 한나라는 돈황 옥문관(玉門關)을 지키던 임문(任文)을 보내 누란왕을 납치하기도 했다.

한나라 측에 볼모로 보낸 누란 왕자는 한나라 법을 어겨 거세 당하는 궁형(宮刑)에 처해지는 비참한 운명을 맞기도 했다. 누란왕이 죽자 흉노 측에서는 자신들이 보호하던 왕자를 보내 왕으로 삼았다. 이 왕은 ‘등거리 외교’의 원칙에 따라 한나라를 방문할 필요가 있었지만 업무를 핑계로 찾아가지 않았다. 누란과 흉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한나라는 부개

자(傅介子)를 보내 누란왕을 암살하고 그의 동생 위도기(尉屠耆)를 왕으로 옹립했다.

비록 한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국호가 바뀌는 수모를 겪지만, 크로라이나 왕국은 지속됐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오히려 한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중국 왕조인 서진(西晉)이 건립되었던 4세기에도 현지어로 크로라이나라는 이름을 간직했을 뿐 아니라 룽노르에서 호탄에 이르는 타림분지 남쪽 루트를 장악한 중요한 세력으로 남았다.

수자원 고갈되고 사막의 모래바람 심해지면서 사라져

이렇게 누란은 외교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성을, 경제·문화적으로는 교역을 통해 외국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에 맞게 변화시켜 번영한 실크로드의 국가였다. 비록 등거리 외교에 따라 흉노와 한나라 측의 간섭에 정치적인 시련을 겪었지만, 크로라이나는 실크로드의 교역 등을 통해 계속 생존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크로라이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라지고 만다. 6세기 무렵부터 수자원이 고갈되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 속에 사라진 실크로드의 도시국가 크로라이나는 역사문헌과 20세기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 실체가 남아 우리에게 약소국의 고난과 생존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다. 🍷

글 이광태(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물과 나무, 인간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
물향기수목원



드론으로 촬영한 물향기수목원 모습



물방울온실



물방울온실 내부 모습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 그리고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5월 문을 열었다. 수목원이 위치한 수청동(水淸洞)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물향기수목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규모는 34만㎡(약 10만 평)로, 한두 시간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기에 알맞다. 물향기수목원에서 곳곳에 숨은 봄의 흔적을 미리 만나보았다.

물향기수목원은 만경원, 미로원, 토피어리원, 수생식물원, 단풍나무원, 물방울온실, 습지생태식물원, 무궁화원, 한국의소나무원, 호습성식물원 등 총 19개의 테마로 꾸며진 주제원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뽐내는 1천900여 종의 꽃과 나무, 각종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겨울색이 완연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주 관람로를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수생식물원이 눈에 들어온다. 물향기수목원이 개원하기 전 이곳이 임업시험장으로 사용됐는데 당시 나무에 물을 대는 저수지였던 곳을 수

생식물원으로 조성했다.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 물에 떠 있는 식물, 물속에 잠겨 있는 식물들이 고루 모여 있으며, 올챙이, 물고기, 쇠물닭, 논병아리 등이 숨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다. 수생식물원은 동양식 정원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방문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수생식물원을 지나면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을 형상화한 물방울온실이 나온다. 지상 1층 지하 1층 연건평 1천132㎡의 유리 마감 건축물로 인공폭포, 연못, 전망 데크 등이 함께 조성돼 있다. 아열대식물인 파파야, 파인애플, 비파나무, 바나나 등을 만나볼 수 있어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하다.

온실을 나와 데크길을 따라가면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습지생태원이 나온다. 5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습지생태원에서는 물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군의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다. 주변에는 수양벚나무, 갯버들, 용버들, 메타세쿼이아 등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단풍나무원은 말 그대로



메타세쿼이아길

단풍나무 종류를 모아 놓은 곳이다. 경사면에 능선을 만들어 다양한 단풍나무 과의 식물을 심어놓았다. 단풍나무원은 가을에도 아름답지만 봄의 싹이나 여름의 녹음도 그에 못지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의 소나무원은 다양한 종류의 소나무를 볼 수 있는 산책로다. 솔송나무, 개잎갈나무, 백송, 처진소나무 등 소나무과에 속하는 8종의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호습성식물원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사는 곳으로, 습지생태원이나 수생식물원이 경관에 중점을 두었다면 호습성식물원은 종 보존 및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66개

의 연못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연못 안에는 수련, 백련, 제비꽃, 흰꽃창포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팀 전성호 주무관은 “물향기수목원은 수목원의 이름에 담긴 물을 주제로 수생식물원, 습지생태원, 호습성식물원을 조성해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소개하며 “날이 풀리면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도 이 세 주제원”이라고 말했다.

물향기산림전시관은 수목원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림문화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물향기산림전시관 외부 모습



물향기산림전시관 내부

인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했다. 전시관은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었으며, 특별상설전시관, 상설전시실(3개), 영상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숲의 생명력을 주제로 한 복합영상을 관람할 수 있고, 상설전시실에서는 숲과 인간의 문화, 습지의 생태, 산림의 혜택에 대한 전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실내체험코너와 야외체험학습장도 갖추고 있어 산림과 습지의 생태를 배우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된다.

방문객 대상 숲해설 프로그램 등 운영

물향기수목원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수목원 내 19개 주제원을 탐방하며 나무와 꽃 등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숲 해설 프로그램과 유아를 대상으로 생태놀이와 자연관찰을 통해 오

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원에서 만나는 유아숲’, 나무재료를 활용해 생활물품을 만들어보는 ‘목공예 체험’, 물향기수목원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한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나 올해부터는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계획(산림청)을 준용해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미만-10인 미만 운영) 단계별로 이용인원에 차등을 두어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향기수목원은 1호선 전철역 오산대역에서 가까워 인근 경기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명소로 이름이 높다.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3~5월과 9~10월에는 오후 6시, 6~8월에는 오후 7시, 11월~이듬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1월 1일과 설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휴원하며,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면 그 다음 날 휴관한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어린이 700원이다. 📍

경기 오산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물향기수목원 제공

이슬람 제국을 탄생시킨 ‘페스트’



오늘날 이슬람교는 전 세계 13억 명의 인구가 믿는 거대한 종교다. 이러한 이슬람교는 서기 630년 아랍인들이 세운 이슬람 제국의 정복 전쟁을 통해 세계 각지로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을 만들기 이전까지 아랍인들은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낙타와 양 같은 가축을 키우며 오랫동안 로마와 페르시아 같은 주변의 외세에 휘둘리며 살아가던 약소민족이었다.

이런 아랍인들이 어떻게 13억 명이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와 그 이슬람교를 전파한 초강대국인 이슬람 제국을 세웠을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이슬람 제국의 탄생은 바로 ‘페스트(흑사병)’라는 전염병 사태로 인한 행운이었다. 서기 541년 7월, 동로마의 영토였던 이집트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페스트가 나타났다. 이 페스트는 무역선들이 머물렀던 항구 도시인 펠루시움(Pelusium)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고 그 결과 펠루시움이 모두 시체를 보관하는 무덤으로 변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생길 만큼 전염성이 강했다.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갑자기 머리에 열이 나다가 가랑이와 겨드랑이와 귀 뒤쪽에 작은 혹들이 솟아나면서 고통을 느끼다가 배가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입으로는 계속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고 눈이 피처럼 붉게 충혈된 상태로 힘없이 쓰러져 죽어갔다. 펠루시움에

서 발생한 페스트는 빠른 속도로 알렉산드리아에도 나타나 번졌다. 그리고 페스트는 벼룩에 감염된 쥐들이 탄 무역선을 통해 지중해 각지의 항구 도시로 퍼져 나갔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물론, 이탈리아와 갈리아(프랑스)와 스페인에 까지 페스트가 창궐했다. 그리고 4년 후인 545년에는 동로마의 적대국인 페르시아에도 페스트가 퍼졌다. 페르시아에서 페스트에 걸려 죽은 사람도 동로마 못지않게 많았는데, 대략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로 희생됐다.

페스트로 쇠약해진 동로마와 페르시아

중동을 지배하던 동로마와 페르시아가 오래 된 페스트로 인해 쇠약해지자, 아랍의 예언자 무하마드는 610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아랍의 문화적 환경에 맞게 받아들여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만들어 아랍인들에 전파했다. 그러면서 무하마드는 “모든 아랍인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더 이상 외세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하마드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결국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를 앞세워 630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무하마드는 632년에 죽었고, 그의 친구인 우마르가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우마르

는 오랜 내분을 치른 아랍 사회가 계속 단결하려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아울러 아랍보다 훨씬 풍요로운 동로마와 페르시아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 두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슬람 제국의 군대는 불과 14년 만에 페르시아를 공격해 멸망시켰으며, 60년 동안 동로마로부터 시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빼앗았고, 심지어 711년에는 북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의 스페인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지배하던 서고트 왕국도 무너뜨렸다.

신흥 세력인 이슬람 제국이 순식간에 기존의 초강대국들인 동로마와 페르시아를 몰리쫓던 이유는 두 나라가 페스트 때문에 인구가 크게 줄어 국력이 약해졌던 것에 반해, 인구 밀도가 적은 사막에서 흩어져 유목 생활을 하던 아랍인들에게는 흑사병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기 6세기에 불거진 페스트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인 로마와 페르시아를 약화시키고, 그 둘을 대신할 새로운 초강대국인 이슬람 제국을 탄생시키는데 본의 아니게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아울러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주위의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휘둘러오던 아랍인들이 굳게 단결한 뒤 불과 100년도 안 돼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을 세우고 찬란한 번영을 누린 일은 세상에는 영원한 강대국도, 영원한 약소국도 없다는 교훈을 증명하는 것이다. 🍯

글 도현신 작가

‘이산 저산’, 그 사이 채움과 비움



김준권, '이산 저산', 판화(채묵목판), 192×342cm, 2017

한국의 자연을 규정하는 몇 개의 요소들 가운데 산은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70% 이상이 산지로 이뤄진 한국의 지형상 한국의 가장 전형적인 풍경은 산에서 나온다. 우람한 산맥에서 야트막한 구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산들은 연결과 중첩의 형상으로 깊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보여준다. 여기 소개하는 '이산 저산'은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산들의 겹침을 절묘하게 한 화면에 담아낸 김준권의 채묵목판 작품이다. 채묵목판이란 수묵과 채색을 함께 쓴 목판화 작품이라는 뜻이다. 유성안료에 비해 담백한 맛이 훨씬 빼어난 채묵목판화는 특히 산의 겹침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매체다.



김준권, '산운', 채목목판, 400×160cm, 2009

동아시아 특유의 목판화 기법을 현대미술로 접목

김준권은 판화가다. 목판화 가운데서도 수묵목판의 세계에 천착하는 그는 한중일의 수묵목판 전통을 자신의 한 몸에 담아낸 인간문화재급 예술가다. 목판화가는 그리고, 새기고, 찍어내는 세 가지 재주에 두루 빼어난 '화각인삼절(畫刻印三絶)'을 기본으로 한다. 그림을 그리고 목판에 새기는 것까지는 다수의 목판화가들이 꿰고 있는 덕목인데, 새기는 일은 좀 다르다. 수묵을 이용해서 찍어내는 동아시아 특유의 목판화 기법을 현대미술로 접목한 김준권의 예술적 위치는 독보적이다.

한국만큼 목판화 전통이 유구한 나라도 드물다.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나라의 저력은 세계 최고의 목판각 기반 출판문화의 실력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국난극복의 서사나 종교적 서사로만 읽을 일이 아니다. 단기간 내에 고난이도의 작업을 해낸 목판문화의 힘을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깊이 새겨볼 일이다.

1980년대부터 목판화 작업에 전념해오던 김준권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한국 전통의 판화 기법을 공부했다. 그는 일본의 우키요에(일본 에도시대에 발달한 목판화)를 깊이 들었고 아예 중국으로 건너가 노신미술학원에서 중국의 판화 기법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학습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한중일의 목판 전통을 이어낸 그는 현대미술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새로운 모색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오랜 기간 한 길을 걸어온 김준권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 벌어졌다.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리였다. 남북 정상이 방명록에 서명을 한 공간을 운치있게 채워준 작품, '산운'(2009)은 김준권 수묵목판 세계를 새삼 주목하게 해주었다. 우아하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한국 산의 운치를 집약한 이 작품은 여백의미를 담아내면서도 화면 가득한 수묵의 묘미를 한껏 선보인 작품이다. 수십 개의 목판각 작업을 하나의 종이 위에



김준권, 보리밭-가파도, 판화(유성다색목판), 95×180cm, 2017

담아내는 과정에서 새김과 찍어냄의 맛깔난 변주를 연출해내는 판화가의 손길을 상상해보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 걸려있는 작품 ‘이산 저산’은 수묵목판 작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채색을 통해 그 맛을 한 단계 더 쌓아올린 채목목판화다. 화면 좌우의 높은 산에서 가운데 낮은 산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구도로 화면 중양을 비워놓음으로써 여백의미를 최대한 살려낸 ‘산운’에 비해, ‘이산 저산’은 우람한 산맥의 흐름을 화면 가득 채운 후 수묵의 깊은 맛에 채색의 화사함을 더한 작품으로서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전자가 여백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여백의 여린 맛에 채움의 강한 힘을 더한 작품이다. 김준권의 산 그림은 산이라는 입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동시에 산과 산 사이의 허공을 드러낸다. 가득 찬 것들 사이의 채움과 비움을 통해 시공간의 심연을 보여주는 것이다.

치열한 답사와 체험이 예술적 성취로 이어져

김준권이 천착해온 화각인의 지고한 세계는 치열한 답사와 체험이 예술적 성취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 산의 매력을 대형 판화에 담아내기 위해 김준권은 지난 30년간 자연을 화면에 담는 데 전념해왔다. 그는 곡선미가 빼어난 한국의 산을 화면에 담기 위해 방방곡곡을 누빈다. 그는 전문가들과 함께 백두대간 탐사대를 꾸리면서 직접 체험한 한국 산의 매력을 담아낸다. 자연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기고 찍어내는 그의 노고와 함께 미적 체험의 대리자로서 김준권은 자연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긴 세월 발품을 팔았다.

국회의장 집무실에 걸려있는 판화작품 ‘보리밭-가파도’는 유성다색목판 작품이다. 6개의 판각을 조합해 다양한 색의 변주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수묵이나 채묵으로 제작한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이 작품은 김준권 판화가 다수의 판각으로 이뤄지는 노동집약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새삼 발견하게 해준다. 피사체의 이미지를 디지털 프린트 한 번으로 뽑아내는 최첨단 사진술의 시대에 김준권은 집요하게 화각인의 공정을 반복한다. 예술은 최종의 결과만이 아니라 무수한 노동 과정을 통해 더욱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 화각인의 장인 김준권을 통해 새삼 확인하는 진리다. 🍵

글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임진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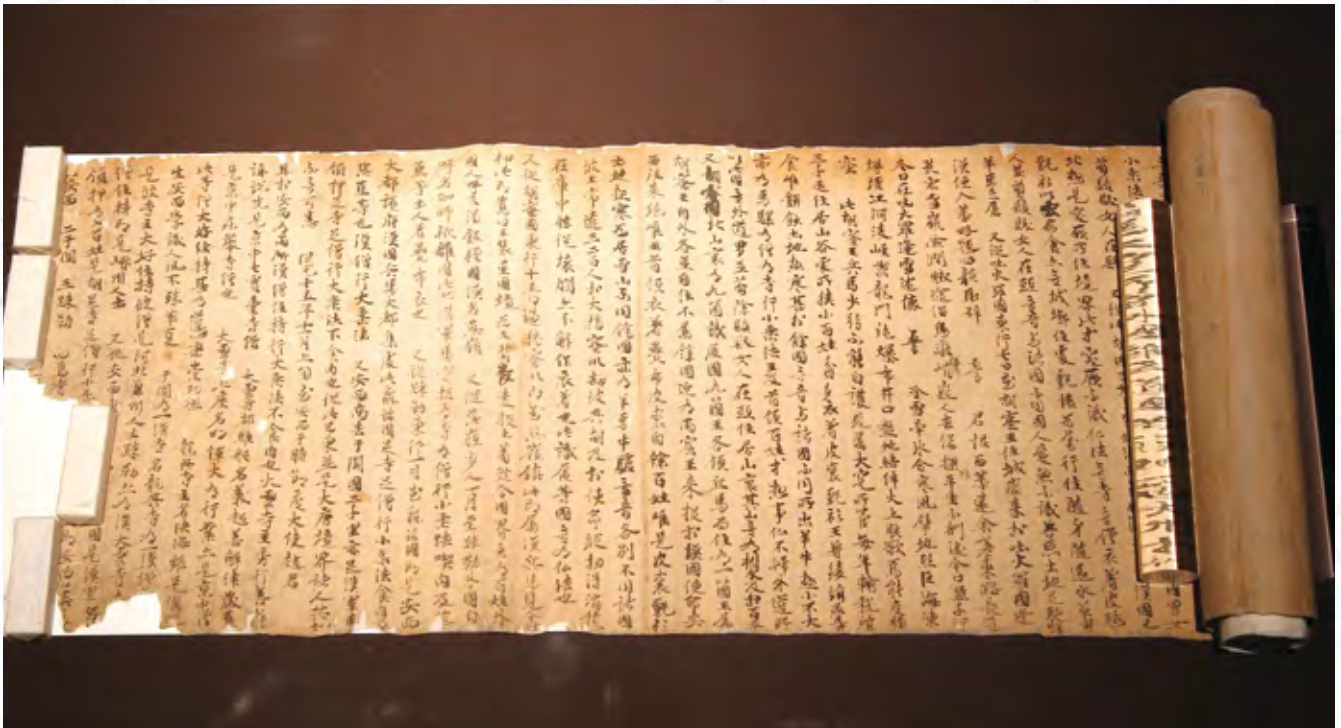
목련

봄의 전령사 ‘목련’.

국회 경내에 목련 꽃봉오리가 초록빛을 머금고 봄을 준비합니다.

흑독한 겨울을 묵묵히 잘 견디고 봉긋봉긋한 하얀 꽃망울로 봄을 전하러오는 모습이 기특하고 반갑습니다. 어느새 우리 옆을 촉촉히 적셔주는 싱그러운 새싹처럼 지난 한해 춥고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국회의 봄소식을 기대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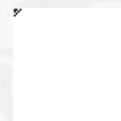
왕오천축국전- 국내 전시(2010년)

2만km 대장정... 한국 최초의 세계인,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2010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크로드와 둔황-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이란 특별전이 열렸다. 이 전시의 화제작은 단연 혜초(慧超, 704~780년)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는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유물이 처음 공개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왕오천축국전'은 혜초가 723~727년 인도와 서역(아랍,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당시 인도를 천축이라고 불렀다. '왕오천축국전'은 다섯 천축국(五天竺國) 즉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천축을 다나온(往) 기록이라는 뜻이다.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중국 둔황(敦煌) 막고굴(莫高窟)에



서 발견했다. 중앙아시아 조사에 나선 펠리오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지역의 카슈가르를 거쳐 1908년 2월 둔황에 도착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둔황 지역의 고문서였다. 그는 막고굴 관리인을 설득해 17굴 석실 장경동(藏經洞)을 조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장경동은 고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었다. 1908년 3월 어느 날, 고문서를 조사하던 펠리오는 앞뒤 일부가 떨어져 나간 필사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펠리오는 숨이 멎는 듯했다. 서명도 저자명도 떨어져 나갔지만, 중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펠리오에게 그건 틀림없는 ‘왕오천축국전’이었다.

펠리오는 관리인과 흥정을 진행했고 중요 문서 6천여 점을 선별한 뒤 혈값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손에 넣었다. 펠리오는 그해 5월 둔황을 떠나 10월 베이징(北京)에 도착했고 거기서 문서들을 프랑스로 부쳤다. ‘왕오천축국전’은 곧바로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들어갔다.

4년에 걸친 인도와 서역 등 대장정 기록

혜초는 신라 땅 경주에서 태어났다. 719년 열다섯의 어린 나이에 밀교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어 723년 인도로 구법(求法) 기행을 감행했다. 중국 광저우(廣州)를 출발해 바닷길로 인도에 도착한 혜초는 불교의 8대 성지를 순례한 후 서쪽으로 간다라를 거쳐 페르시아와 아랍을 지났고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 파미르 고원을 넘었다. 이어 쿠차와 둔황을 지나 727년 11월 당나라 수도인 시안(西安, 당시는 장안)에 도착했다. 4년에 걸친 2만km의 대장정이었다.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다.

혜초가 둘러보고 기록한 지역은 모두 40여 곳. 여기엔 다섯 천축국 뿐만 아니라 서역 중앙아시아 지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다. 혜초는 먼저 갠지스강 유역 평야지대인 동천축의 바이샬리에 도착했다. 동천축에 대해 “사람을 파는 죄와 사람을 죽이는 죄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든 쿠시나가라 지역에선 “숲이 너무 우거지고 물소, 호랑이가 살고 있어서 예불하기가 어렵다”고 기록했다. 중천국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가 위치한 곳. 룸비니를 찾은 혜초는 “성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탑은 있으나 승려도 없고 백성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남천축에서는 “왕과 수령, 백성들이 삼보를 숭상하며 절도 많고 승려도 많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다섯 천축국의 일상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다섯 천축의 법에는 목에 칼을 씌우거나 매질을 하거나 투옥하는 일이 없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벌금을 물리되 죽이지는 않는다”, “서천축 사람들은 노래를 아주 잘 한다”, “아랍의 침입으로 나라의 절반이 파괴되었다” 등등.

간다라, 바미안을 거쳐 페르시아에 이른 혜초는 “페르시아의 왕은 예전에 아랍을 지배했었다…지금은 아랍에게 병합되어 버렸다”, “이곳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며 하늘을 섬기고 불법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혜초는 중국으로 돌아가던 중 사마르칸트에 들러 “이곳에서는 낙타, 노새, 양, 말을 기르고…모두 수염과 머리를 깎고 흰 모직 모자를 즐겨 쓴다”고 적었다. 이렇게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서역 곳곳의 언어와 지리, 역사와 종교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자 탐험여행기라 할 수 있다.

227행 5,893자 남아 있는 두루마리 필사본

‘왕오천축국전’은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현재 227행에 5,893자가 남아 있다. 폭 42cm, 길이 358cm. 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필사본에 대해선 혜초가 직접 썼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혜초의 원본을 보고 누군가 필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원본이 아니라 축약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혜초의 천축 여행은 기본적으로 구법여행이었다. 그러

나 혜초의 관심은 불교에 머무르지 않았다. 정치·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 언어와 지리, 기후 등 인문지리까지 확장됐다. 혜초는 구법의 길을 떠난 밀교승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 가득한 문명탐험가였다. 혜초를 ‘한국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혜초는 신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 땅에서 생을 마쳤다. 둔황에 잠들어 있던 ‘왕오천축국전’은 벽안의 서양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프랑스로 넘어갔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2만km를 여행한 세계인 혜초의 운명이자 ‘왕오천축국전’의 매력일지도 모른다.

‘왕오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에 있다. 이를 두고 ‘약탈

당한’ 문화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폴 펠리오가 1908년 막고굴 관리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해간 것이다. 약탈에 가까운 구매였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구입했기에 중국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이래 대중들과 만날 수 있었던 공개 전시는 단 한 차례. 국내에 있었다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이 더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무작정 아쉬워할 일도 아니다. 해외에서 그 존재 의미를 드높이면 된다. 프랑스 소장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프랑스에서 전시하고 연구,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둔황 막고굴 17호실 장경동



중국 시안의 혜초비

대한민국 의정 종합뉴스

6시 & 뉴스N

빠르고 정확한 정치뉴스

예리한 이슈 분석

속 시원한 현안 토론



앵커
신동진

앵커
강아랑

월~금 저녁 6시 방송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에 빛나는 별 하나

서울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흔적을 찾아서

시인 윤동주는 1945년 일본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서시 1·2행)' 기도했던 윤동주는 그렇게 1945년 2월 16일 하늘의 별이 됐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의 자취를 찾아 연세대와 종로구 누상동,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돌아봤다. 그 길 위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서시 6행)'하고자 했던 마음을 배운다.

운동주와 핀슨홀

고목에는 봄물이 늦게 오른다. 양지바른 땅에 푸른 기운이 돌고 때 이른 꽃도 피었는데, 운동주 시비를 높은 곳에서 감싼 고목의 가지는 아직 겨울이다.

운동주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첫머리에 연세대학교를 둔 건 1968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세운 운동주 시비 때문이었다. 시비 앞면에는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서시'가 새겨졌다. 뒷면에는 운동주의 삶에 대한 짧은 글이 있다. 1938년 연희 동산을 찾아 1941년 문과를 마쳤고, 일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펼치다 투옥된 뒤 모진 형벌로 29세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지은 구슬 같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등불이었다는 내용이다.

운동주 시비가 있는 곳은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던 운동주가 사색하고 고민하며 시를 구상하고 썼던 곳이다. 시비 뒤에 보이는 오래된 건물이 핀슨홀이다. 1922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당시 학생 기숙사로 사용됐고 운동주는 이곳에서 생활했다.

핀슨홀에 운동주 기념관이 있다. 그의 생애와 작품, 작품에 얹힌 이야기, 문우와 지인 등이 이야기한 운동주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운동주의 방은 3층 다락방이었다. 지금은 다락방을

볼 수 없지만, 전시실에 당시 사진을 바탕으로 기숙사 책상과 물품 등을 재현해놓았다. 운동주와 송몽규의 학적부와 성적표, 운동주가 태어난 집의 기와도 있다.

10대부터 문학의 꿈을 키우고 동시와 시를 써오던 운동주에게 연희전문학교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었다. 그에게 새로운 길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새로운 길' 2연 1행)' 길이었다.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9번지

1941년 봄 운동주는 기숙사에서 나와 소설가 김송의 집(지금의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한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직진, 우린은행 골목을 따라 가다 보면 길 가운데 정자가 보인다. 정자 옆 이정표에서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간다. 그 길에 운동주가 살았던 하숙집터가 있다. 집과 주변 풍경이 다 바뀌었지만, 그가 살았던 집을 알리는 안내판이 벽 한쪽에 붙어 있어 운동주가 살던 집을 알리고 있다. 운동주는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북이현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마지막 1년이기도 했던 그때,



연세대에 있는 운동주 시비. 뒤에 보이는 건물이 당시 운동주가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인 핀슨홀이다.



수성동 계곡. 종로구 누상동 운동주 하숙집터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공원 내 윤동주 시인의 언덕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글이 새겨진 돌

그는 졸업 기념으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엄혹한 통치하에서 시집을 내는 것을 걱정한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시집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옛 흔적 하나 없는, 윤동주 하숙집터를 알리는 안내판 앞에서 그의 시 몇 편을 떠올려보며 잠깐 머물렀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십자가’ 4·5연에서-

윤동주 하숙집터를 뒤로하고 수성동 계곡에 도착했다. 수성동 계곡은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

며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너럭바위 한쪽 끝이 절벽을 이루었다. 그 절벽 아래 물이 흐른다.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은 돌다리가 아슬아슬하다. 윤동주는 이곳을 거닐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수성동 계곡 위쪽 숲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찾길 나온다. 우회전해서 윤동주문학관 방향으로 간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서다

‘참회록’은 1942년 윤동주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쓴 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욕될까’로 시작되는 이 시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슬픈 사람의 뒷모양이/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로 끝을 맺는다. 식민지 조국을 떠나는 그의 마음을 읽는다. 윤동주는 일본 도쿄 릿쿄 대학 문학부를 다니며 쓴 ‘쉽게 씌어진 시’ 등 5편의 시를 서울의 친구에게 보낸다. 그해 여름 고향에 잠시 다녀온 뒤 교토 도시샤 대학에 편입했다. 이듬해 여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 모진 형벌로 29세에 목숨을 잃는다. 타국에서의 외로운 죽음, 그러나 그는 이미 시 ‘별 헤는 밤’에 이렇게 썼다.



윤동주문학관 제2전시실.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별 헤는 밤’ 중에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올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시인 윤동주를 생각한다. 제멋대로 구불거리며 자란 소나무 몇 그루 사이에 그의 시 ‘서시’를 새긴 시비가 보인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서시 6행)’했던 그의 마음을 안고 목책을 따라 한양도성 성곽 앞 소나무 앞으로 간다. 그 길에 매화와 산수유꽃이 ‘화르락’ 피어 봄기운이 인다.

윤동주문학관으로 내려간다. 윤동주문학관은 2012년에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들었다. 제1전시실에는 시인의 생활이 담긴 사진과 친필원고 영인본을 전시했다. 시인의 생가에 있던 우물을 수리할 때 나온

목재 널판도 볼 수 있다. 제2전시실은 청운수도가압장의 물탱크였는데 하늘을 가리고 있던 윗부분을 없앴다. 하늘과 바람과 별들이 고일 것 같은 그 마당에서 윤동주가 태어난 고향집 마당을 본다. 제3전시실은 물탱크를 크게 고치지 않은 모습이다. 천장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으로 한줄기 빛이 들어온다. 식민지 조국을 품고 살았던, 일제의 옥에 갇힌, 청년 윤동주가 품은 희망의 빛 같았다.

윤동주문학관을 나와 다시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윤동주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하루를 마감하기에 그곳이 가장 어울리겠다 싶었다. 해 지는 하늘에 노을이 피어나고 매화 향기 담은 바람이 불어가는 어둠 속에서 별이 하나 둘 살아나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마지막 행).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글에 실린 시는 문학사상사에서 발간한 윤동주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기념관과 윤동주문학관 전시물, 윤동주 시비 등에서 발췌.

*연세대학교 핀슨홀에 있는 윤동주기념관은 코로나19로 현재 관람할 수 없다.



피동형을 피하세요

‘쉬운 영어 네트워크(PLAIN)’는 공문서 작성의 길잡이로 능동태 사용을 권장한다. 영어의 ‘능동태’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다. 누가 그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다. 이와 달리 ‘수동태’는 행위의 객체가 주어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체보다 객체를 강조하고자 할 때 ‘수동태’를 즐겨 사용한다. 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수동태’, 즉 ‘피동형’을 즐겨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동형을 사용하면 화자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1)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 광합성 시스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신연구성과, 2016. 7. 27.) ⇨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 광합성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 (2) 청과부류 법인(공판장)에서는 ... 채소 경매장이 부족하여 마늘·양파 임시경매장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청, 공보관실 보도자료, 2017. 4. 5.) ⇨ 청과부류 법인(공판장)은 ... 채소 경매장이 부족하여 마늘·양파 임시경매장 승인을 요청하였다.

예문 (1)과 (2)에 사용된 ‘~에 의해 개발되었다’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둘 다 어색한 피동형이다. 이를 ‘개발하였다’와 ‘요청하였다’로 대체하면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영어의 ‘수동태’는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또는 행위의 주체가 너무 분명할

때, 행위의 주체보다 객체를 더 강조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최상의 문체다. 그런데 한국어의 ‘피동형’은 영어 또는 일본어에 영향을 받은 것일 뿐, 최상의 문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보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문체라는 점에서 공문서에서 ‘피동형’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되어지다, 보여지다, 쓰여지다, 잊혀지다’처럼 피동 표현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도 표현의 간결성 면에서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이어서 (충북도청, 공보관 보도자료, 2019. 9. 23.) ⇨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 (4) 펀드의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어떠한 사업에 쓰여지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보도자료, 2010. 12. 24.) ⇨ 펀드의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어떠한 사업에 쓰는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예문 (3)과 (4)에서 이중피동 표현인 ‘사용되어질’은 ‘사용될’로, ‘쓰여지는지’는 ‘쓰이는지’로 대체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용될’은 ‘사용할’로, ‘투자자금이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지’는 ‘투자자금을 어떠한 사업에 쓰는지’로 대체할 수 있다. 피동형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피동형을 써야 할 자리와 쓰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2월 임시국회 개회,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2월 1일

- 2월 임시국회 개회

2월 3일

- 정의당,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출범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여야 정 협의체' 제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2월 4일

- 국민의힘,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
- 국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

2월 5일

-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2월 9일

- 박병석 국회의장,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방문
- 국민의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진애 의원 확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희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2월 10일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2월 17일

-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이 복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2월 18일

- 여성가족위원회,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내용의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 의결

2월 19일

- 국민의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촉구

2월 22일

- 환경노동위원회,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 실시

2월 23일

- 국민의힘,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 사업 종결 수순이라고 반발하며 재개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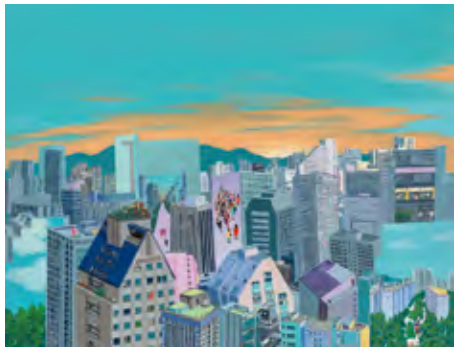
2월 24일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민주당,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2월 26일

- 국회, 본회의 열고 법률안 63건 등 총 72건의 안건 의결

정리 윤성혜



모던 풍속

2021. 3. 3. - 3. 30.

국회 ART GALLERY 3월 작품전

- 장소 국회의원화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The Floating World〉 등 회화 15점
- 작가 노반
- 추천 김웅 의원실
-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편집후기〉

겨우내 움츠린 마음을 털어내고 힘차게 시작하는 3월입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담기 위해 3월호 제작에도 온 정성을 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한웅현 홍보출판위원회 위원(문화소통기획관)

흑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낸 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풀꽃과 나무를 보며 자연이 주는 위로에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꿋꿋이 이겨내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희망가득한 3월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님 지역구 취재를 위해 수원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취재 시간이 아속할 정도로 수원화성은 아름다웠습니다. 날이 풀리면 아이들과 손잡고 수원화성을 거닐며 정조대왕의 효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영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재를 위해 한국양봉협회에 다녀왔습니다. 개화기인데도 기상이변으로 꿀벌이 줄고 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양봉산업법’이 위기에 빠진 양봉업계를 살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박민선

독자들에게 나무와 풀꽃을 소개하기 위해 국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보니 어느새 제가 힐링이 되었습니다. 식물을 가까이하면 행복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사실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봄을 느끼면서 행복한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혜

국회방송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전면개편

“내 손안의 국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기존 설치자는 업데이트)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